

제6회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집담회 2008.10.7

제국일본의 음악정책-중일전쟁 전후 일본의 음반검열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지선(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

토론자: 이준희(성공회대 강사)

발표: 전시하 일본이 대중을 통제하고 선동하기 위해서 펼친 음악에 대한 다양한 통제정책 중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시작된 음반검열에 초점을 맞추어 그 규모와 실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이 전시 하에서 대중을 선동, 통제하고 문화권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중음악정책을 펼쳤는지 음반검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고 한다. 중일전쟁 전후에 음악통제는 음반검열을 시작으로 다양한 통제정책을 펼쳤다. 중일전쟁 전까지 음악에 대한 통제는 시국에 적절하지 않은 음반을 정화하는 '검열'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이 시기를 '소극적 통제의 시기'라 일컬을 수 있다. 반면, 중일전쟁 발발 후에는 음반검열의 강화와 함께 국민정신총동원의 기치 아래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노래들이 현상모집되었고, 이 노래들은 정부의 음악정책에 따라 '국민가요'의 형태로 보급되기도 했다. 나아가 미영 재즈음악을 금지하는 '미영음악의 추방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따라서 중일전쟁 발발 후에는 전시 체제가 뚜렷해짐에 따라서 음반에 대한 검열 강화와 더불어 군국가요와 국민가의 독려, 미영음악 추방운동까지 동시에 진행되어 가는 '적극적 통제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토론자: 법제화되기 이전에 음반검열의 실례들을 좀 더 폭넓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유행가가 검열에 많이 걸린 것이 일본 음반중 유행가의 비중이 더 높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선이나 대만등 일본 외지에서서의 발매된 앨범 중 검열에 걸린 사례들이 있음을 볼 때 내지와 외지의 검열기준의 상호연관성과 영향은? 음반검열 말고 음악에 대한 통제라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음반검열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부분, 즉 인적 통제나 단체 통제등이 실질적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발표자: 조언을 수용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조선, 대만을 아울러 볼 때 제국 일본의 음악정책이 가능함. 제목, 부제 부적절. 중일전쟁기라기보다는 1930년대 초반이 문제임. 정확히 하려면 1930년대 전반기의 일본의 음악검열 이런식으로 고치는게 좋을 듯. 제국이라 할 때는 일본, 조선, 대만등의 관계를 다룰 때 말할 수 있을 듯. 일본과 조선, 대만과의 차이점을 좀 더 보면 함의를 찾을 수 있을 듯. 일본에서 일본인이 연구하는 것하고 한국에서 이 연구를 하는 것과 차별점을 두려면 제일조선인의 통제라던지 이런 관점을 집어 넣는 것이 좋을 듯.

플로어: 왜 이 시기를 다루어야 하는가? 이 시기를 드러내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후를 보여주어야 할 듯. 사례분석의 유형화, 내용 분석을 좀 더 해주면 좋을 듯.

플로어: 검열이 당시 전체 음반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시대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 검열 문제를 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

플로어: 인문학적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가령, 안녕과 풍속은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어떨지. 또한 검열하는 측뿐만 아니라 생산자, 유통자등 검열당하는 자의 입장에 서보는 것은 어떨지.